



이슈 & 사람 ▶ 5면

해외 사례로 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참관기 ▶ 6면

CCBN 2016으로 본 중국의 방송기술

오피니언 ▶ 7면

[칼럼] 막장 드라마

지상파 VS 유료방송 재송신 소송 '일진일퇴'

법원 "저작권 인정하나 CPS 인상 금액 수긍할 수 없어"

최근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의 재송신 갈등에서 지상파 저작권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지상파가 제기한 '지상파 재송신 상품 신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양측 간 이견 차로 협상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정 소송도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당분간 재송신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3월 23일 KBS와 MBC, SBS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CMB를 상대로 낸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재송신 계약이 종료된 CMB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기업자당 재송신료(CPS) 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당분간 기존 CPS로 지급한 뒤 향후 재계약 타결 시 차액을 소급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상파 3사는 지난 해 5월 22일 CMB를 상대로 디지털지상파방송 채널을 포함한 방송 상품 신규 판

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재송신 분쟁 해결을 사업자 간 저작권 행사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당시자 협이나 동의 여부에만 좌우되고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지상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상파 3사는 남부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또다시 기각 결정에 놔렸다.

서울고법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부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케이블 방송사들에게 지상파 채널 별도 상품 무료 제공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점 △가처분 신청의 진정한 목적이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들과의 재송신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CMB가 계약 만료 후에도 종전 CPS를 지급하고 있고 협상 타결 시 인상분을 소급 정산하겠다고 밝힌 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배상액이 CPS 170원 또는 190원으로 정해진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목적(가

처분을 통한 협상력 확보)이 달성될 경우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CPS의 과도한 인상을 강요할 수 있고 이는 최종적으로 기업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상파 방송사들의 CPS 400원 요구에 대해서도 "280원에서 400원으로 42%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면서 막연한 사정을 들고 있을 뿐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사업자들 간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판단 취지는 이해한다"며 "다만 CMB가 이러한 결과를 과대 포장해 향후 재송신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송신에 따르는 권리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일관된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손해에 관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미래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위 구성 중"

이례적으로 법정 심의 사항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 마련키로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자문단을 운영한다. 또 방송의 공공성과 지배력 전이 문제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선 법정 심사 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부는 3월 23일 이번 M&A 심사와 관련해 방송 부문에선 방송·법률·경제·소비자 등 외부 전문가 8~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통신 부문에서는 법·경제·회계·기술 분야 10인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심사위와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인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는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미래부가 방송법과 IPTV법 등 법정 심사 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을 마련해 심사위에 제출키로 했다. 방송위

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허가 및 재허가, 변경 허가 시 정부가 심사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세부 심사 기준을 정해 정성적으로 평가해왔다.

이에 대해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방송 부문 M&A에서 이번처럼 많은 쟁점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며 "과거 사례, 해외 규제 기관의 심사 기준, 의견 청취 등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나온 쟁점을 정리해 심사위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공개한 방송 심사 주안점(안)은 크게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공정성 실현과 유료방송 공정 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으로 나눌 수 있다. 방송을 통신 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시켜 방송 시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또

공익성 잣대 중 하나인 지역 채널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보도 채널 보유로 지역 여론을 독점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SK텔레콤이 결합 상품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은 없는지 지배력 전이 문제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M&A와 관련해 이해당사인 기업들과 관련 협회 10곳에서 제출한 1,300페이지 분량의 의견과 언론사에서 제기한 쟁점 등을 종합해 심사에서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와 자문단 구성으로 인허가 결정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M&A 심사 기간은 인허가 신청서 제시일로부터 60일로 이미 심사 기한이 지났지만 여론 수렴 기간을 제외하고 30일까지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 결론이 지어져야 한다. 하

KBS, ATSC 3.0 기반 부가 서비스 실험 방송 성공
"VOD 등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했던 부가 서비스 구현"

KBS와 LG전자가 3월 29일 미국식 표준인 ATSC 3.0 방식에 기반한 초고화질(UHD) 방송 부가 서비스 실험 방송에 성공했다.

이번 실험 방송은 관악산 송신소에서 55번 채널로 송출됐으며 방송 편성표와 연계한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재난 발생 시 속보 자막 표출과 속보 영상 재생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KBS는 "이번 실험 방송은 UHD 본 방송을 앞두고 그동안 KBS를 비롯한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이 수행해온

'시청자가 원하는 지상파 UHD 방송과 정책적 지원 방안' 토론회



2017년 2월부터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이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2017년 2월 수도권 지역부터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국적인 UHD 방송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지상파 UHD 도입을 위한 추진 과제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추진 체계 및 추진 일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지상파 UHD 방송은 수용자인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말 그대로 국민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도 "지상파 UHD 방송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방송 장비, 콘텐츠 산업, 광고 산업 등에 생산 유발, 부가가치 증대, 고용 창출 등의 효과뿐 아니라 타 산업에 미치는 2차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디지털 전환 당시 과오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 전환 당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다채널, 양방향 서비스 등 실질적인 시청자 복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약속했던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재원 투자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정은 원수한 지상파 방송사는 아직까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와 학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UHD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UHD 특별법 제정'도 그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다채널 방송 도입으로 지상파 UHD 방송이 단순한 화질 개선이 아니라 시청자 복지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는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는 지상파 UHD 방송의 모습이 무엇이고, 지상파 UHD 방송의 안정된 정착과 시청자 복지 향상을 위해선 어떤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주 제 시청자가 원하는 지상파 UHD 방송과 정책적 지원 방안
- 일 시 4월 5일(화) 15:00 ~ 18:00
- 장 소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한국방송학회
- 후 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지만 미래부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한을 특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 기한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경쟁 업계와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은 통합방송법 처리 이후에 이번 M&A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을 살펴보면 이번 M&A에 다양한 범위에 걸쳐 영향을 줄 조항들이 있다"며 "사안 자체가 중대한 만큼 법 개정 이후 철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백선하 baek@kobeta.com

of Broadcasters, NAB) 2016 K-UHD 테마관에 전시해 ATSC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 KBS의 앞선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열 KBS 기술본부장은 "KBS는 지상파 UHD 방송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청자에게 사랑받는 KBS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특히 UHD 방송이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권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방송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숙희 sh45@kobeta.com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어디까지 진행됐나?

방통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관련 심사 돌입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등 심사 절차 강화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존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의 핵심인 방송의 공공성 훼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3월 22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 사업 (재)허가 등 사전 동의 기본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3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허가 및 재허가, 변경 허가 권한을 미래부로 이관하고, 허가 등 여부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허가와 SO 변경 허가 역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 자체적으로 심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미래부가 요청하는 사전 동의 중 SO 등 유료방송 변경 허가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무처 내부에서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번 SK텔레콤

과 CJ헬로비전의 M&A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판단,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키로 했다.

심사위원장과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과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중 추천을 받아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협의를 거쳐 9명 이내로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변경 허가의 경우 본 심사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왔으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본 계획 변경 사유를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공정위와 미래부에 CJ헬로비전 M&A 허가와 SO 변경 허가 등 신청서류를 냈다. 절차에 따르면 방통위는 5월 말까지 미래부에 사전 동의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전달해야 된다.

백선하 baek@kobeta.com

KT-LG유플러스, 공정위에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철저한 심사 요구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신 시장의 독점 지배 상황 반영해야"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를 촉구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내놓은 통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공정위 심사에 반영할 것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할 것 △이번 M&A를 허용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것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서류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기업 결합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심사 마감일은 이달 말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먼저 이번 M&A가 허용되면 SK텔레콤의 독점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18일 공개된 KISDI의 '통

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매출 점유율은 50.3%, 가입자 점유율은 49.4%, 이동전화 포함 결합시장 점유율은 51.1% 등으로 통신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입증된 만큼 공정위 심사에 통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심사 기간을 늘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해외 규제 기관은 소비자의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대 사안일 경우 최장 19개월까지 심사한다"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양사에 따르면 영국의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영국 최대 유선통신사업자 BT(British Telecom)와 이동통신사 EE(Everything Everywhere)의 인수를 11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 승인했으며 홈페이지에 합병 심사 진행 과정과 공정회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DoJ(법무부 산하 독점금지국)과 함께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Comcast Corporation)와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 간 합병을 14개월 동안의 조사 후 불허로 결정했으며, AT&T와 디렉TV(DirecTV) 합병 심사 역시 13개월 이상 합병의 영향성을 검토하며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마지막으로 이번 M&A가 허용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소비자 손

실 가능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M&A가 허용되면 CJ헬로비전 독점 방송 구역 중 19곳의 SK군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한 사업자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 경쟁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2000년 SK텔레콤에 신세기통신과의 기업 결합, 2008년 하나로텔레콤과의 기업 결합을 각각 조건부로 허용한 바 있다. 공정위는 번번이 미흡한 시정조치를 내려 통신 3사의 점유율을 5대 3대 2로 고착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경미한 시정조치만 부과해 합병을 승인한다면 전체 방송통신 시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KT에 이어 LG유플러스 직원도 "CJ헬로비전 임시 주총은 무효" 소송 제기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수익 가치,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과대평가"

KT 직원에 이어 이번에는 LG유플러스 직원이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 와의 합병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직원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J헬로비전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했다고 3월 22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직원 A씨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관련법 위반 등의 합병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등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주총 무효나 취소를 구하려면 주주로서 원고적격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KT에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LG유플러스 법인 대신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나선 것이다.

A씨는 주총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의 주식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수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합병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SK브로드밴드의 수익 가치'를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과대평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합병가액 산정 시 2014년 4,767억 원에 그친 인터넷TV(IPTV) 영업 수익을 2019년에는 1조751억 원으로 무려 1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지난 3년간 20% 수준인 IPTV 시장 점유율도 2019년까지 전체 가입자의 70% 이상이 가입한다고 가정한 점 등 영업 수익을 과다하

게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된 합병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춰 무효(2007다64136 판결)이므로 합병 계약 승인 결의 또한 무효"라며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KT 직원도 3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결의한 2월 26일 CJ헬로비전의 임시 주총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 직원 역시 CJ헬로비전 주총 결의 무효 사유로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특히 KT 직원은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과 함께 CJ오쇼핑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

정한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J헬로비전의 지분 53.9%를 보유한 CJ오쇼핑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찬성했지만 이는 사실상 SK텔레콤의 뜻으로 실질적인 지배자인 SK텔레콤이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 전에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되려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정부의 인허가 불허 시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주총 결과는 정부의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며 이들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백선하 baek@kobeta.com

학계 "제대로 된 심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미래 지향적·타당한 정책 방향과 심사 기준 필요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가운데

데 학계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빚발치고 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3월 2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기업의 인수합병 심사와 공적 가치, 방송정책의 새로운 경로 형성'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심영섭 한국외대 외래교수는 "정책 당사자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은 심사 기준조차 명확히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목표와 정책이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 교수는 "지금 당장 주어진 조건에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변화를 예측한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통합 방송법이 계류 중으로, 현행 방송법만이 아니라 미래의 정책인 통합 방송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미래부는 M&A 심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면서 밀실 심사 논란에 휩싸였다. 심 교수는 미래부의 이러한 태도가 졸속 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을 낼 것을 우려하며 "(M&A에 대한) 찬성·반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의 정책 결정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미래부가 드디어 이번 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보고 충격을 받은 심사 기준이 하나 있다"며 미래부가 제시한 공익성 심사 기준의 하나인 '국가 안보 등을 위한 통신 자료 제공 및 통신

제한 조치 협조'를 언급했다.

정 부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성과 정부가 생각하는 공익성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러한 기준이 제시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 기준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같은 맥락으로, 국가 보안과 인권 보호를 두고 찬반 여론이 거세게 충돌했던 만큼 심사 기준으로 제시된 것에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학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타당한 정책 방향과 그에 걸맞은 심사 기준이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이번 건을 개별 상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라며 이번 M&A 건만이 아니라 미디어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촉구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지상파-케이블, 3월 31일까지 VOD 협상 연기 개별 SO와 'VOD 대가 CPS로 전환' 등 합의 가닥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주문형 비디오(VOD) 공급을 둘러싼 협상을 또다시 연기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연장으로 양측은 3월 31일까지 관련 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케이블 사업자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에 실패하자 올해 1월 1일 신규 VOD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자 케이블 업계는 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고 블랙아웃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VOD는 방송이 아닌 부가 서비스'라며 개입을 주저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정부의 중재로 지상파는 신규 VOD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고, 케이블 업계 역시 광고 송출 중단 계획을 철회하며 1월 31일

까지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상파 3사는 2월 1일 오후 6시부터 씨앤앰을 제외한 케이블 업계에 또다시 신규 VOD 공급을 중단했다. 두 번째 협상 파행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13일 지상파 3가 남인천방송을 비롯한 개별 SO 10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재송신료(CPS)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CPS를 190원으로 징수 판결했다. 문제는 개별 SO들이 "1심 판결 금액에 대한 공탁으로 지상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더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 산정을 위해 항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지상파 관계자는 "개별 SO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그 법원에서 판

결한 190원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공탁하겠다고 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상파 3사는 케이블에 VOD 공급을 중단한 지 나흘 만인 2월 5일 오후 6시부터 VOD 공급을 재개했고, 2월 29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상파가 VOD 공급을 재개하자 케이블도 2월 12일부터 MBC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철회했다. 이번 협상 연장에서는 티브로드와 현대HCN도 씨앤앰과 마찬가지로 개별 협상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협상 마지막 날인 2월 29일 양측은 또한 한 번 협상 시한을 3월 18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당시 업계 관계자는 "개별 협상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합의의 선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VOD 서비스를 둘러싼 합의가 상당한 진척이 이뤄졌음을 암시했다.

이번에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VOD와 CPS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막바지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액 기반

의 무료 VOD 공급 대가를 CPS로 전환하는 것과 기존 CPS 인상 등 여러 가지 논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씨앤앰에 이어 현대HCN까지 CPS 400원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아마 지상파의 요구 대부분이 수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상파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방송 환경 변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지상파가 하락하는 광고비 비중을 상쇄하기 위해선 유료방송 플랫폼에 제공하는 실시간 및 VOD 요금을 통제함으로써 매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지상파의 콘텐츠 양면 시장 중 광고 시장의 하락세로 인한 부담을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흡수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정 mj kang@kobeta.com

지상파 DMB 8월부터 고화질(HD)로 방송된다

내리막길 지상파 DMB, '밀 빠진 독' 오명 벗을 수 있을까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지상파 DMB가 고화질(HD)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던 저화질 문제 해결로 '밀 빠진 독'이란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는 3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뉴스퀘어에서 'HD DMB 방송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지상파 DMB 방송을 HD 화질로 송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1280*720) 서비스가 시작되면 현재 QVGA(320*240)보다 12배 선명해진다.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수학 YTN DMB 상무는 "시청자 이용 형태 조사에서 불만족 사항으로 지적됐던 저화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스마트 시대에 HD급 영상 품질과 프리미엄 콘텐

츠 채널로 모바일 방송의 변화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D급 고화질 방송은 오는 6월 시험 방송을 거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열리는 8월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본 방송이 시작된다.

휴대폰과 내비게이션 등 단말 제조사는 본 방송 전에 HD 방송이 가능한 신규 단말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최근 2년 이내 출시된 스마트폰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HD급 DMB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지상파 DMB 관계자는 "2년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에 대한 실험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1년여 정도 기간을 두고 테스트해 이전 단말기의 저화질 문제도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HD급 지상파 DMB 서비스가 무료 방

송 서비스라는 수익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 대접을 받았던 지상파 DMB는 저화질, 모바일 전용 콘텐츠 부재, 수신 불량 등의 문제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지난해에는 광고 매출 약 170억 원으로 매년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상파 DMB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사업성이 없는 지상파 DMB를 중단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른 부분에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수신 불량 해결 없이 HD 방송만으로는 지상파 DMB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상파 DMB의 공식적인 커버리지는 95%에 가깝지만 시청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커버리지는 3분의 2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박모(32)씨는 "1호선은 지상으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만 넘어가면 수신이 안되고 3호선이나 5호선 등 서울 지하철은 물론이고 지로에 위치한 빌딩에서도 수신이 안 될 때가 있다"며

수신 불량 문제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방송사 관계자는 "서울 중심부에서는 건물이 높아서 수신이 끊기는 경우가 있지만 지하철이나 터널 등의 문제는 법 개정으로 해결되고 있어 수신 문제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정된 방송통신법에 따라 터널이나 아파트, 빌딩 지하에서도 재난 방송이 원활하게 수신되도록 중계 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지상파 DMB 끊김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어 "지상파 DMB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데 지상파 DMB는 무료 보편적이라는 기본 성격에 재난 방송으로서의 역할도 있는 만큼 사회에서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신 문제에 이어 화질 문제까지 해결되면 재도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백선하 baek@kobeta.com

손석희 JTBC 사장 무혐의 처분…“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수사” 비판

방송협회 “책임자가 모르는 방송, 정상적인 방송사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방송 화면 캡처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JTBC 법인과 당시 선거 방송 TF 팀장을 맡았던 PD 김모(40)씨와 소속 기자 이모(37)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상파 3사와 기밀 유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용역기관 임원인 김모(47)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 시각을 결정한 것은 당시 선거 방송 스튜디오 담당 PD였던 김씨와 정치부 기자 이씨였다"며 "손 사장과 오 보도 총괄이 '출구조사 결과는 지상파 3사 보도 이후 인용 보도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욕심에 지시를 어겼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출구조사 결과 자료를 입수한 뒤 SNS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한 모 언론사 기자 김모(38)씨와 이모(30)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해당 처벌 규정 요건인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는 오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 비밀'이자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JTBC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JTBC가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 도용한 것에 대한 고소장과 소장을 각각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3월 9일 오전 9시 손 사장 등을 영업 비밀 침해 혐의로 소환해 9시간 가량 무단 사용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JTBC가 지상파 3사와의 협의 없이 소속 기자를 통해 미리 출구조사 자료를 입수해 방송 시스템에 입력해둔 다음 지상파 3사와 사실상 동시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JTBC의 혐의 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손 사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JTBC에는 책임자들의 겸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고위 임원진들이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방송협회는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선거 방송에서 책임자들은 아무도 모른 채, 팀장이 책임을 지고 방송했다는 검찰의 판단은 정상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사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이번 결정이 JTBC 보도 책임자들을 모두 험수아비 취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24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생산해낸 자적 재산을 무단으로 훔쳐서 방송에 사용하는, 도덕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책임자들은 전혀 모른 채 팀장이 전권을 행사해 방송했다는 검찰의 결론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처사"라며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수사에 그친 검찰의 이번 결정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언론노조 MBC본부, 85.42% 찬성률…압도적 파업 결의

"우선 회사와의 단체협약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파업을 결의했다. MBC본부노조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 파괴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93.26%에 찬성을 85.42%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MBC본부노조는 "이번 파업 찬반 투표의 찬성을은 서울과 지역 지부 동시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던 2010년 이근행 집행부 당시 파업 찬성을 72.7%, 2011년 정영하 집행부 당시 파업 찬성을 71.2%와 비교해 압도적"이라며 "현재 무단협 MBC 상황에 조합원들의 분노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MBC는 지난 2012년 김재철 전 사장 시절 단협이 해지된 뒤 계속 무단협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MBC본부노조는 단협 타결을 위해 법률에 정해진 순서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지만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조정은 결렬 됐지만 오죽하면 중노위 결정문에 협상을 계속하되

조합 상근자를 인정하라는 식의 권고문을 추가로 넣었겠느냐"며 "이번 파업 찬반 투표는 중노위 조정 결렬에 따른 당연하고 합법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MBC본부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하면서 "한 번엔 합법 파업권, 다른 한 번엔 협상 카드를 쥐고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응하겠다"며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파업 결의 이후에도 "늘 그랬듯이 조합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회사가 끊임없이 '신의와 성실'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인 토론과 협상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액면 그대로 믿어볼 생각"이라고 밝혀 우선 사측과의 협상을 먼저 진행할 것을 선언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파업의 가능성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단협을 비롯해 해직자 문제 등 노조와 사측 간 협상은 점차 풀기 어려운 괴인 실태라가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MBC 사측은 '파업 투쟁밖에

모르는 노조 지도부의 시대착오적 인식과 모습이 한심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놓고 "노조가 선거 때만 되면 정치 파업에 나선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노조 지도부의 이번 파업 시도는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는 뒷전인 노조 지도부와 강성 해고자들의 밥그릇 쟁기기의 결정판이 될 것"이라며 "상습적인 중노위 제소를 통해 파업 명분을 쌓은 뒤 자신들의 해고자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량한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회사를 들쑤시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MBC본부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 이후 조합에 대한 회사의 부당행위가 더 심해졌다. (조합은 협상에 적극 임할 것인데) 협상하는 시늉만 내면서 시간 끌기를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협상안을 가지고 끈수를 부린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투쟁 수위는 회사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방송기술용어

MQTT 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MQTT는 사물 통신(M2M), 사물 인터넷(IoT)과 같이 대역폭이 제한된 통신 환경에 최적화해 개발된 푸시 기술(push technology) 기반의 경량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로, IBM사와 유로테크(Eurotech)가 공동 개발했으며 2014년 국제 민간 표준 기구인 오아시스(OASIS) 표준으로 제정됐다.

MQTT 프로토콜은 푸시 기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 대신 메시

지 매개자(broker)를 통해 송신자가 특정 메시지를 발행(publish)하고 수신자가 메시지를 구독(subscribe)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즉, 매개자를 통해 메시지를 송수신한다. 메시지 길이가 가장 작은 2바이트까지 가능하고 초당 1,000단위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이가볍고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페이스북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 MQTT를 사용하고 있다.

전숙희 sh45@kobeta.com

‘반전’ 노리는 넷플릭스, ‘마블 데어데블’ 시즌 2 공개

먹을 것 많은 ‘소문난 잔치’ 될 수 있을까?

초기 성적표가 썩 좋지 않은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 오리지널 시리즈인 ‘마블 데어데블’ 시즌 2로 흥행몰이에 나선다. 기대와 달리 콘텐츠 부족으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 넷플릭스가 잇따른 자체 제작 콘텐츠 공개로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시리즈 ‘마블 데어데블’ 시즌 2를 3월 18일 오후 5시 1분(한국시간 기준)에 전 세계에 공개했다.

‘마블 데어데블’은 어린 시절 시력을 잃었으나 특별한 감각을 지닌 매트 머독(찰리 콕스)이 뉴욕 헬

스 키친에서 낮에는 변호사로, 밤에는 슈퍼 히어로 ‘데어데블’로 변장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인 매트 머독역을 맡은 찰리 콕스를 포함, 존 벤탈(프랭크 캐슬), 에로디 영(엘렉트라), 데보라 앤 월(카렌 페이지), 엘든 헨슨(포기 넬슨), 로사리오 도슨(클레어 템플), 스콧 글렌(스티) 등 초호화 출연진이 모였다.

넷플릭스는 “마블 데어데블”은 또 다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마블 제시카 존스(Marvel’s Jessica Jones)’와 추후 공개 예정인 ‘마블 루크 케이지(Marvel’s Luke Cage)’, ‘마블 아이언 피스트’

(Marvel’s Iron Fist)와 함께 향후 넷플릭스에서 독점으로 공개할 ‘마블 디펜더스(Marvel’s Defenders)’에 모두 함께 등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마블 데어데블’ 시즌 2는 HDR(High Dynamic Range)로 마스터링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HDR은 화면이 표현할 수 있는 빛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 어두운 곳은 더욱 어둡게, 밝은 곳은 더욱 밝게 표현하는 기술이다. 한 마디로 실제 눈으로 보는 장면과 가장 흡사한 영상을 화면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블 데어데블’ 시즌 2 공개 소식이 알려지자 넷플릭스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시장조사업체 널슨코리아클리어이 3월 초 내놓은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과 국내 OTT 산업 현황’에 따르면 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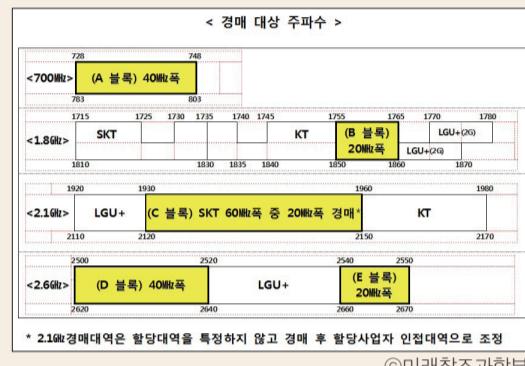
플릭스 애플리케이션의 실제 이용자는 주간 5만~6만 명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바람이 미풍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첫 달 무료 제공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콘텐츠로 대다수가 유료 가입자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장점 중 하나인 자체 제작 콘텐츠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마블 데어데블’ 시즌 2 공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하우스오브카드뿐 아니라 데어데블 또 다른 히어로 시리즈까지 계속 콘텐츠를 확충해 나간다면 상황이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최저 입찰 2조5천억…주파수 전쟁 시작됐다

미래부 ‘주파수 할당 계획’ 확정…4월 말 주파수 경매 실시



의무는 다소 완화됐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4월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할당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말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할당될 주파수 및 대역폭은 △700MHz대역 40MHz폭(A블록) △1.8GHz대역 20MHz폭(B블록) △2.1GHz대역 20MHz폭(C블록) △2.6GHz대역 40MHz폭(D블록) △2.6GHz대역 20MHz폭(E블록) 등 총 5개 블록 140MHz폭이다.

각 사업자는 140MHz폭 중 최대 60MHz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신규 공급 대역인 700MHz, 1.8GHz, 2.6GHz 대역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10년, 2.1GHz 대역은 5년이다. 경매는 우선 1단계 동시오픈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 방식을 적용한다.

최저 경쟁 가격은 A블록 7,620억 원, B블록 4,513억 원, C블록 3,816억 원, D블록 6,553억 원, E블록 3,277억 원이며 최종 할당 대가는 가격 경쟁을 통해 확정된다. 앞서 토론회에서는 2013년 주파수 경매 당시와 비교해 최저 경쟁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미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번 최저 경쟁 가격은 지난 경매의 낙찰 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기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번 할당 계획은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수용을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 이동통신 서비스 고도화 및 ICT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와 전파정책자문회의 등 각계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 활성화와 빠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전국망 기준으로 13만 개 기지국을 운용하는 것을 감안해 광대역은

최소한 6만8,900국, 협대역은 4만2,400국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다만 2.6GHz대역과 협대역을 함께 낙찰받은 사업자는 4년 차까지 기준 기지국(10만6,000국)의 85%를 구축하도록 하되 협대역은 이 의무를 면제키로 하는 등 망 구축의무를 기준보다 완화했다.

미래부는 또 사업자의 불화실성을 해소하고 경매의 공정성과 적정한 가격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2월 재할당 예정인 2.1GHz대역 80MHz폭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안도 밝혔다.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 대가 산정 기준 및 경매 낙찰가를 모두 고려해 이번 2.1GHz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해 산정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돼 국민 편의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또한 약 6조 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700MHz 주파수 경매 앞두고 통신 업계 ‘고민’

“700MHz 무선마이크 간섭 가능성 높아”…‘무용지물’ 전략 우려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K-ICT Grand Spectrum Auction 2016)을 최종 확정하고 3월 18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이날 미래부가 공개한 주파수 경매 최종 안은 3월 4일 열린 토론회에서 밝힌 계획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일부 주파수 대역의 망 구축

는 740~752MHz 대역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이동통신에 할당한 700MHz 대역 728~748MHz(상향), 783~803MHz(하향) 중 상향 대역인 740~748MHz 대역이 무선마이크 대역과 겹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700MHz 대역의 주파수 간섭 현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무선마이크 대역으로 인한 주파수 간섭은 700MHz 주파수 용도 문제를 논의할 당시부터 불거졌던 문제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무선마

이크와 통신 간 간섭을 주장하며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더라도 통신 사업자가 당장 700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 업계에서는 통신과 무선마이크 상호 간 영향이 적고, 간섭 회피 기술 등을 적용하면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일부 매체는 “주파수 사용량을 100으로 본다면 이 중 90%가량이 하향 대역에서 사용되고, 겹치는 대역도 8MHz 폭으로 크지 않아 간섭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으나 본지 조사 결과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상향 대역 8MHz 폭뿐 아니라 보호 대역에서도 4MHz 폭 혼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통신 할당 시 해당 대역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주파수 혼신의 문제는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파수 경매를 코앞에 둔 통신 업계는

700MHz 주파수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선마이크로 인한 간섭 문제 때문에 700MHz 주파수의 효용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할당받아도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0년 900MHz 주파수를 할당받은 KT 역시 간섭 문제로 주파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KT는 900MHz 주파수를 2,500억 원에 할당받았으나 해당 대역에 LTE 기지국을 설치하자 RFID(전자태그), 고출력무선전화기(코드리스폰), 900MHz 맥슨 무선전화기 등과 혼신을 일으켜 기지국 설치를 중단했다.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에 통신 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T-커머스 10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사업자 난립 논란

학계 “홈쇼핑과 T-커머스 겸영 사업자 시장지배력 우려”

사업자 난립으로 T-커머스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0개의 T-커머스 사업자 모두 사업권 재승인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홈쇼핑과 T-커머스 채널을 겸영하는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월 24일 T-커머스 10개사를 대상으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전 사업자가 재승인 기준인 500점 만점에 350점 이상을 획득해 사업권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승인을 받은 10개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KT하이텔의 K쇼핑, 아이디지털홈쇼핑의 쇼핑엔T, 신세계TV쇼핑의 신세계쇼핑, SK브로드밴드의 Btv 쇼핑, 더블유쇼핑의 W쇼핑, GS홈쇼핑의 GS마이샵, CJ오쇼핑의 CJ오쇼핑 플러스샵, 현대홈쇼핑의 현대홈쇼핑플러스샵, 우리홈쇼핑의 롯데OneTV, NS쇼핑의 NS샵플러스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5년 동안 T-커머스 사업권을 유지한다.

미래부는 3월 21일 방송·영업·법률·회계·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T-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공청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사위는 재승인 조건으로 △핀테크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ICT 양방향 서비스 구현 △TV 홈쇼핑 방송 상품 중복 편성 비율 제한에 따른 신규 중소기업 유통 판로 확대 △중소 납품업체 판매 수수료 인하 등을 제안했다.

미래부는 심사위의 제안 조건을 참고해 오는 4월 중 재승인 조건이 부과된 재승인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홈쇼핑 채널 사업자들의 겸영과 미래부의 비공개 심사 등을 이유로 지난해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 업체가 나온 것처럼 이번 T-커머스 재승인에서도 1~2곳 업체가 탈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미래부는 이번 없이 10개 사업자의 재승인을 결정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재승인으로 홈쇼핑과 T-커머스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스마트 미디어 시대, T-커머스 발전 방향’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는 “사실상 홈쇼핑 사업자 5개사가 2개의 홈쇼핑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홈쇼핑과 T-커머스 사업의 겸영이 결과적으로 시장지배력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홈쇼핑 겸영 T-커머스의 경우 연동형으로 전환하는 등 채널 수를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규제 기관에서도 1기업 2채널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DMB 시장을 언급하면서 “지상파 계열사 외에 나머지 3개 중소 사업자가 고사 직전에 있는 DMB처럼 T-커머스 시장도 몰락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재하거나 심사를 강화해 홈쇼핑 사업자와 T-커머스 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중기적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정립하는 등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이 역시 이번 심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현재 홈쇼핑과 T-커머스 사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업체들의 난립과 그로 인한 생존 경쟁으로 홈쇼핑과 T-커머스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학계의 이 같은 지적에 홈쇼핑 관계자들은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사업인데 겸영을 이유로 비판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으나 학계 전문가들은 “홈쇼핑과 T-커머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만 집중한다면 애매한 위치에서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민정 mjkang@kobeta.com

2016년 1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 개최

CBS, YTN, CJB, TBN 등 10명 방송기술인상 수상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3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 방송 회관 15층에서 2016년 1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을 열었다.

방송기술인상은 국내 방송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기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방송기술 인의 위상을 크게 높인 이들에게 매분기별 수여되는 상으로 2014년에 제정됐다.

1분기 방송기술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YTN 강창국(방송기술연구 부문) △KBS 김한천(방송영상/편집) △아리랑국제방송 박준영(방송기술연구 부문) △CBS 성기승(방송제작기술 부문) △CJB 이승호(시스템관리 부문) △EBS 정재우(방송기술연구 부문) △EBS 조세권(방송제작 기술 부문) △SBS 조영훈(송신 부문) △MBC 최기호(방송제작 부문) △TBN 한성용(시스템개발 부문)



민서진 seojin@kobeta.com

방송기술저널이 선정한 2016년 방송계 이슈

해외 사례로 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경쟁 제한성 여부” ‘시장 지배력 확대’ ‘이용자(소비자) 편의 제한 여부’ 중점 심사해야”

방송통신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정부의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찬반 격론이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는 물론이고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여론 등도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례없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전과 달리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찬반 양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방송기술저널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본격 심사에 앞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사례를 통해 방송통신 업계 M&A는 어떤 방향으로 심사가 진행돼야 하는지 정리해 보고, 방송통신 업계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이번 M&A 심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국가	연도	M&A업체	정부 심사 결과
미국	2011년	이동통신	2위 AT&T 4위 T-Mobile 불허(자진 철회)
	2014년	이동통신	3위 스프린트 4위 T-Mobile 불허(자진 철회)
	2015년	케이블	1위 컴캐스트 2위 타임워너케이블 불허
		이동통신+위성	2위 AT&T 1위 DirecTV 조건부 승인
독일	2014년	이동통신	3위 이플러스 4위 텔레포니카 조건부 승인
스페인	2015년	이동통신+위성	1위 텔레포니카 2위 Canal Plus 조건부 승인
덴마크	2015년	이동통신	2위 텔레노어 3위 텔리아소네라 불허(자진 철회)
일본	2010년	이동통신+케이블	2위 KDDI 1위 J.COM 승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방송통신 업계의 M&A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M&A를 통한 경영 효율과 경쟁력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해외 방송통신 업체들의 M&A 사례를 살펴보면 불허 또는 조건부 승인이 더 많다”며 M&A 찬성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 국가의 최근 M&A 현황을 보면 불허와 승인이 절반 정도로 M&A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먼저 미국은 2011년과 2014년 통신 업계 M&A를 불허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T&T와 T-Mobile의 M&A는 통신 요금 인상 요인을 발생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FCC는 “T-Mobile USA는 저가 요금 정책을 펼쳐왔던 기업인데 M&A를 하게 되면 저가 업체의 부재로 통신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또 AT&T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일자리 감소의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스프린트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15% 내외에 불과했음에도 FCC와 법무부 반독과점국(DOJ)은 T-Mobile과의 M&A에 반대했다. DOJ는 “스프린트와 T-Mobile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고, T-Mobile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 중요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M&A로 사업자가 줄어들게 되면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또 다른 동종 업계 M&A인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의 M&A도 불허했다. FCC와 DOJ는 “합병 법인이 57%에 육박하는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을 압용해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연계 산업의 발전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미국 유력 일간지들은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의 M&A로 경쟁 저해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M&A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실

등을 계속 내보냈다. 미국 일간지들이 기업 M&A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독점적 성격이 강한 방송이나 통신 사업에서 M&A 허용을 통해 독점 사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방송통신 업계 M&A를 무조건 불허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2위 이동통신 업체인 AT&T와 미국 내 최대 위성방송인 DirecTV의 M&A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FCC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감소에 따른 이용자 공익 감소의 우려는 있으나 이번 M&A로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FCC는 저소득층 결합 상품 요금 할인, 학교와 도서관에 기가바이트 서비스 제공 등 의무 조건을 부여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FCC는 차타와 타임워너케이블의 M&A 관련 승인도 앞두고 있다. 물론 최종 승인까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FCC가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의 추세를 반영해 승인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었다. 만약 이번 M&A가 승인되면 미국에서 동종 업계 간 M&A를 허가한 첫 사례가 된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그동안 동종 업계 간 M&A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독일은 2014년 이동통신 업계 3위와 4위 사업자인 이플러스와 텔레포니카가 합병했다. 다만 독일 정부는 합병 법인의 이동통신망 30%와 보유 주파수 일부를 경쟁 업체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와 신규 업체에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독일 외에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통신 업계의 M&A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독일처럼 강력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덴마크 이동통신 업계 2위, 3위 사업자인 텔레노어와 텔리아소네라는 M&A 발표 후 자진 철회했다. 이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

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선택권 축소, 요금 인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자 자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0년 이동통신 사업자인 KDDI와 방송 사업자인 J.COM의 M&A를 승인했지만 최근 자국 내 방송통신 간 M&A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 업계 간 M&A로 경쟁 제한이 일어나고 있어 독과점이 강화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M&A 사전심사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전 세계 방송통신 업계 M&A 심사는 경쟁 제한성 여부, 시장 지배력 확대 및 이용자(소비자) 편의 제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 전문가들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심사에 공익성 심사가 포함되어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미디어 분야에 집중돼 있는 영국의 공익성 심사는 M&A가 공익성에 미칠 영향을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들을 중심으로 한 ‘정적인 효과’와 M&A 이후 강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디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동적 효과’로 나눠 평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은 2010년 News corp의 BskyB M&A를 놓고 공정성 심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News corp가 BskyB의 뉴스 부분을 분리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방송사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M&A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하게 분석·예측하고,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승인을 하더라도 강력한 조건을 내걸어 방송통신 업계를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방송 산업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리 백선하 baek@kobeta.com

참고 자료

- 황근(2015). “SKT-CJ 인수합병에 따른 쟁점과 정책 과제” 한국언론학회 주최 <방송통신 플랫폼 간 융합과 방송 시장의 변화> 발제 자료
- 성춘일(2016). “SKT 독점과제의 폐해와 통신 시장 규제 방안” 방송통신실천행동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 자료
- 심영섭(2015). “방송통신 기업 간 합병이 방송 플랫폼 및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회 주최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의 조건 세미나> 발제 자료
- 아시아경제 ‘해외 통신방송 인수합병 현황’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22312231792243>
- 이데일리 ‘M 정부, 이동통신 간 M&A 철저히 검증’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41&newsid=01669526606124344&DCD=A00804&OutLnkChk=Y>

2016년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직군별 특성화 교육 미래방송기술 창의인력 양성사업

교육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 교육 접수 안내

- 교육비 : 무료(중식을 제외한 기타 숙식비는 각자 부담)
- 교육 대상 : 지상파 방송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
- 접수 일정 : 매월 접수,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
- 접수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접수
- 교육 접수 후 참가가 어려울 경우, 사전 연락 필수
- (무단 지각 및 결석 시 추후 교육 신청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 TEL : 02-3219-5640~1 / FAX : 02-2647-6813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3층
- 홈페이지 : edu.kobeta.com
- e-mail : bea@kobeta.com

▶ 2016년도 교육계획(안)

구분	교육과정 명	일정	목표 인원	교육 장소
UHD 전문 교육	4K UHD 카메라 및 촬영의 이해	7월	20명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목동)
	4K UHD Color 및 영상의 이해	8월	20명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목동)
	지상파 UHD 활성화 정책 및 해외동향 (글로벌 뉴미디어 전문가 양성 과정 전달 교육 포함)	9월	20명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목동)
AV & Lighting	차세대 방송 조명 실습	7월	10명	SBS 일산제작센터 및 상암MBC
	오디오 MIXING & MASTERING (글로벌 오디오 전문가 양성과정 전달 교육 포함)	7월	10명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목동) 및 상암MBC
방송 시스템	네트워크 및 파일 기반 워크플로우 실무	6월	15명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목동)
	DTV 송신시스템	7월	15명	KBS수원센터 내 송신실습실
	디지털 신호시스템 품질 관리	8월	15명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목동)
	충남권 지역 방송기술 세미나	4월	30명	KBS대전방송총국
지역 교육	충북권 지역 방송기술 세미나	4월	25명	CJB경주방송
	경북권 지역 방송기술 세미나	9월	30명	미정
	전남권 지역 방송기술 세미나	10월	30명	미정
	글로벌 오디오 전문가 양성 과정(AES)	6월	5명	프랑스, 파리, Paris' Palais des Congrès
국외 교육	글로벌 뉴미디어 전문가 양성 과정(IBC)	9월	5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AI 컨벤션 센터
	KOBA World Media Forum	5월	-	Coex 콘퍼런스룸
	KOBA Conference(Pre-Engineer)	5월	-	Coex 콘퍼런스룸
세미나 및 콘퍼런스	KOC 2016	10월	-	미정
	총 계		250명	

*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edu.kobeta.com)에서 확인 바랍니다.



CCBN 2016으로 본 중국의 방송기술

장알찬 KBS 기술관리국

이번 중국국제방송케이블위성기기박람회(CCBN) 참관은 중국중앙방송(CCTV) 방문과 중국전영전시기술학회(CSMPTE) 회장단 미팅을 겸해 이뤄졌다. 참관 첫날은 CSMPTE 회장단과 미팅이 있었고, 둘째 날은 CCTV 견학, 셋째 날은 CCBN 전시회 참관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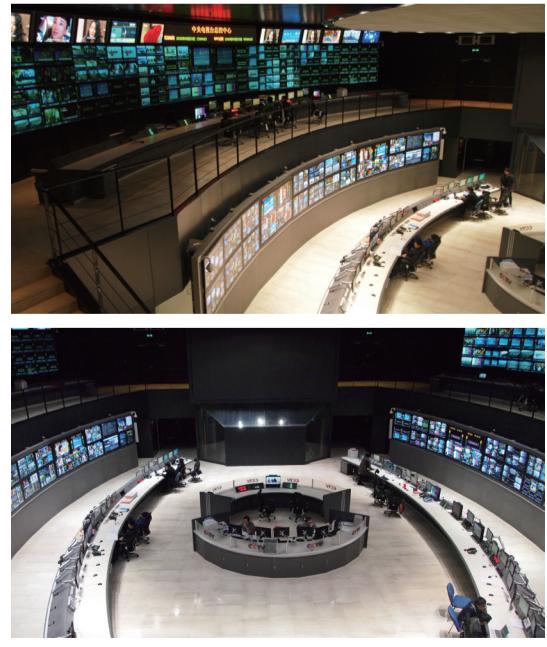
CSMPTE(China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V Engineers)를 만나다

CSMPTE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영화계와 학계, 방송 장비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원사의 회비와 일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장단은 CCTV에서 재임했던 퇴직자로 구성되며 이사장의 경우 4년 중임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CSMPTE는 음성, 기술, 제작, 촬영, 방송, 영화, 인터넷 등 15개 분야의 소위원회로 구성되고, 우수 엔지니어에 대한 시상, 방송장비 및 기술 논문 인증, 엔지니어 자격 등급 심사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미팅에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rean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KOBEA)와 CSMPTE는 정기 교류에 대해 협의했고, 향후 실무자 간 논의를 통해 상호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CCTV(China-Central Television)를 방문하다

CCTV에서는 CCTV의 주조정실과 스튜디오, 4K 편집실, 음향 편집실 등을 살펴봤다. CCTV는 총 43개의 TV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대규모의 주조정실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지상파 송신과 위성은 SAPPFRIT 산하 무선전대관리국에서, 케이블은 각 성의 SO에서, OTT는 CCTV의 자회사인 CNTV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CCTV 주조정실 전경

CCTV는 2008년 사옥 신축 시부터 Full 파일 기반 제작·송출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구축했기 때문에 테이프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녹화들은 최소 1주일 전에 주조로 입고된다고 한다.

스튜디오는 신사옥 20개, 구사옥 20개로 총 40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초고화질(UHD)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로드맵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CCTV에서는 2017년 초에 UHD 프로그램을 케이블로 송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쇼, 다큐멘터리 등의 4K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고, 후반 작업에 많은 공을 들이는 듯 보였다. 실제로 CCTV는 4K 전용 편집실 12실, 20대의 4K 편집기를 운영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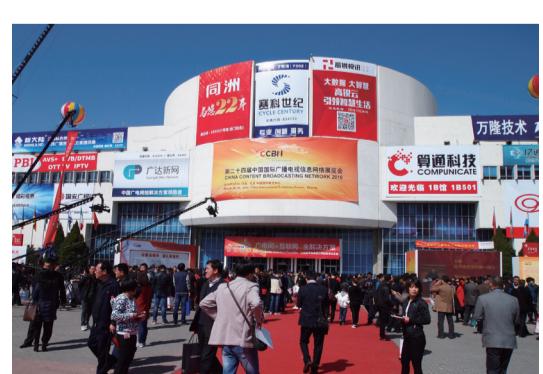
4K 편집실 및 시사실

CCBN에서 중국의 방송기술을 경험하다

전시회명
China Content Broadcasting Network (CCBN)

전시 기간
2016.3.24. ~ 3.26.

전시 장소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CIEC) Beijing, 중국



CCBN은 60,000m² 규모의 중국 북경 국제전시장(CIEC) 내·외부에서 개최된다. 1,000여 개의 방송 및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전시에 참여하고, 30여 개국 10만 명 이상의 참관자들이 방문하는 방송기술 및 장비 박람회이다.

기술/비즈니스 콘퍼런스와 전시회로 나뉘며, 기조연설과 방송발전포럼(CCBN-BDF)에서 업계의 전 세계 리더들이 최신의 방송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3D 컨버팅 기술 전시



대부분 전송(케이블/OTT 셋톱 등) 관련 장비 전시였고, 일부 업체가 VR 제작과 3D 컨버팅 기술을 전시했다.

올해 CES에서 VR이 핵심 키워드였던 데 반해 CCBN에서는 2~3개 업체만이 VR 기술을 전시했고, 오히려 2D를 3D로 컨버팅하는 기술이 관심을 끌었다. 한 업체의 경우 실시간의 3배 시간에 4K 2D 영상을 3D로 자동 변환 후 디자이너가 보정을 하는 기술을 전시했으며, 이 기술로 50~100명이 소요되는 3D 제작 작업을 5명의 인력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D안경이 필요 없어 눈의 피로감도 대폭 감소된다고 한다.

드론 업체의 전시도 있었는데 DAGONG社의 tethered UAV 시스템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100m 상공까지 비행이 가능한 tethered UAV 시스템은 광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이 차량에 연결돼 24시간 HD 촬영이 가능하며, GPS 컨트롤을 통해 탐색차량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중계차에 설치해 중계제작에 활용하면 다양한 영상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CBN은 전시장 대부분이 중국어로 돼 있었으며 영문 안내책자도 구비돼 있지 않아 중국어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참관에 한계가 있었고, 업체 관계자들이 대부분 영어에 능통하지 않아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듣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이 아쉬웠다.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

막장 드라마

칼럼

오건식
SBS 뉴미디어개발팀 부국장

얼마 전 방송미디어공학회 이사회에 다녀왔다. 이사회에서 미모의 M모 교수 가 개최 예정인 워크숍의 제목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 결과 '딥 러닝 기반의 미디어 분석 워크숍'으로 결정됐다. 바야흐로 '머신 러닝'이나 '딥 러닝'이란 단어를 불여야 품이 나는 시대가 도래했다. 국내에서는 이 모든 것이 3월 9일 시작해서 15일까지 딱 일주일 만에 벌어진 사회 현상이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AI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AlphaGo보다 빠른 속도로 진흥책을 내놓았다.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이란 용어가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 2013년쯤인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무식한 필자는 그 용어를 운동기구인 Running Machine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하나쯤으로 생각했다. 한참 스마트폰을 이용한 Health나 Fitness 관련 앱이 넘쳐날 시기였기에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 Running Machine에서 운동을 하면서 해당 앱을 구동시키면 별의별 서비스를 다 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니, 어쩌면 'AlphaGo 프로젝트'는 바둑 하수들(?)의 복수심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다.

Google Deep Mind의 CEO인 하사비스, AlphaGo팀을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실버 박사, '친알파'로 명명된 AlphaGo 착점 대리인 아자 황 박사 모두가 바둑 애호가이다. 나름 바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아자 황 박사는 아마추어 6단이라고 한다.

“

모 통신사는 콘텐츠
발전을 위해 거액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던 전력이
있다. 굳이
Machine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학습능력은
인간도 갖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

”

하지만 바둑을 잘 모르는 필자가 보기에도 아마추어 6단은 프로 9단에게 명함내놓기가 분명 꺼려지는 위치일 것이다. 프로 9단이 보기에도 아마추어 6단은 분명 하수다. 아마 6단이 보기에도 프로 9단은 넘사벽. 그래서 이 세 분들이 혹시 복수의 칼을 간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 우리가 힘을 합쳐서 프로 9단을 한 번 이겨보자'고 도원결의를 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처럼 특정 목적의 복수극에서 시작된 것이니, AlphaGo는 바둑에만 유난히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것이다. 따라서 AlphaGo에 적용된 알고리즘을 범용 인공지능에 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한국기원은 5번의 대국이 끝난 후 AlphaGo에게 명예 9단을 수여했다. 이들의 복수극(?)은 결국 프로 9단을 꺾고 본인들의 분신인 AlphaGo

도 9단으로 대접받으면서 끝났다. 일부 조사에 의하면 240억 원을 투자(AlphaGo Machine 값 및 개발비)한데 비해 Google 및 Google 자주회사의 주식값은 58조 원이나 올랐다고 하니 성공 보수를 엄청 쟁긴 경우가 됐다. 보통 막장 드라마는 끝이 좋지 않은데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해피한 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이 세 틀 9단이 종합 전적에서 AlphaGo에 졌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성공 보수가 엄청났다는 점에서 마음이 쓰리다. 명성을 올리면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Trend를 상기하면, Machine에 인공지능을 심어 준 사람의 의지가 상대방보다 강한 것이지 꼭 Machine의 능력이 뛰어났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고전적인 Block 격파 게임의 경우, Machine은 하루 종일 Block 격파 게임을 하고서야 터널을 파서 집어넣는 방식이 효율적이란 점을 터득했다고 한다. 아마도 사람이라면 초심자라도 한 2시간 만에 터널을 만드는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터득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머신 러닝이나 딥 러닝으로 대표되는 AI가 아니라 AI로 무장한 인간의 욕심이다. 우리는 아이에게 고기를 잡아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란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살아왔다. 고기 잡는 법을 잘 배웠어도 인간은 물리적인 한계로 잡는 양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고기 잡는 법을 알아버린 AI를 통해 고기를 썩쓸이할 수 있다. 결국 Tolerance의 개념을 Machine에 심어주는 것은 인간의 뜻이다.

모 통신사가 모 유선방송과 합병을 한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나 마느냐로 뒤승승하다. 당연히 합병을 해서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만큼 배려나 공헌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통신사는 콘텐츠 발전을 위해 거액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던 전력이 있다. 굳이 Machine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학습능력은 인간도 갖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이 칭송해 마지않는 AlphaGo에 대해 음모론(?)적인 글을 썼으나 이제는 Google에서 연락이 올 것 같다. 혹시 모를 것 같아서인데, 필자 전번은 +82-10-XXXX-4832다.

사설

시장 논리에 앞서 방송의 공적 책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을 둘러싸고 방송통신부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경쟁사 직원들의 합병 결의 주주총회 무효 소송부터 학계 전문가들의 우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까지 인수합병으로 인한 방송통신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은 자본 논리로 해결이 가능한 아주 간단한 사안일 수 있다. 주주의 이득 및 이윤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건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번 인수합병은 단순한 기업 합병을 넘어 방송의 영역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 추구 및 언론 독과점 방지 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방송법 규정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국민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공기 역할을 수행하는 방송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병 조건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지배구조 변화나 소액주주 보호,

고용 승계, 투자 계획 이행 등의 부분은 당연히 충족돼야 할 것이다. 그에 끝지않게 중요한 점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공적 책임의 잣대 적용이다. 합병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결정이 중요하다. 통신재벌기업이 CATV 플랫폼을 확대함으로써 당장 지역 보도 기능 장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몇 년 전 종합편성채널의 무더기 허가가 초래한 언론 편향의 폐해가 심화될 것이 우려되는 것은 기우(杞憂)일까.

빠른 대처가 중요할 때가 있지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바로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그렇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가 임박한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결론을 내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분야와 케이블/콘텐츠 업계의 지배적인 사업자 간 합병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합병이 가져올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독과점 및 부작용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 철저한 심사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불허해야 한다.

시기적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 개정이 완료된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방송법이 제 자리를 잡은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기존 IPTV사업자의 케이블TV 소유경영에 대한 제한 규정이 통합방송법에서 정해진 다음에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것만이 앞으로 닉힐 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번 결정된 일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위원회와 자문단 구성은 심사의 첫 단추 끼우기다.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자문단 구성이 어렵다고 기한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졸속 처리한다면 앞으로의 논란만 키울 따름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개입되는 이유도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라는 뜻이다. 세 부처의 균형 있는 심사가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시장 독점이 가져올 폐해, 공정 경쟁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이후삼 편집주간 | 유주열
편집위원 | 백낙운, 이승호, 남태현, 최권용,
나경록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기획실 | 강동균

인쇄인 | SJC성전

주 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 화 | 02-3219-5637

팩 스 | 02-2647-6813

트 위 터 | @KOBETA_COM

홈페이지 | www.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naver.com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
www.mediatoday.co.kr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에서 깊이 있고 발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 터 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 독 려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고객님을 VVIP로 모시겠습니다.
www.expo114.co.kr / www.magictour.co.kr

두성관광이 귀하의 소중한 여행과 출장을 책임지겠습니다.

전 여행사 패키지여행 최대 7% 할인!

테크니컬 투어 NO.1

Best Partner



라스베가스 방송 NAB

- 기간 : 컨퍼런스 - 2016년 4월 16일 (토) - 21일 (목) (6일간)
 전시회 - 2016년 4월 18일(월) - 21일 (목) (4일간)
- 내용 : 세계 최대의 방송 전시회
-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등 좌석 다수 보유
 - ▶ MGM, PH호텔, 베네치아, 벨라지오 호텔 등 보유
 - ▶ 11가지 안으로 진행 (문의요망)
 - ▶ 라스베이거스 직항 등 선착순 판매!
- 1 안 4월17일-24일 (8일) 박람회 2일 - 3대캐년+엔텔로프캐년 + LA / 아시아나
 2 안 4월17일-24일 (8일) 박람회 2일 -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일주 / 아시아나
 3 안 4월17일-23일 (7일) 박람회 2일 - 그랜드캐년-세도나-LA관광 / 아시아나
 4 안 4월17일-23일 (7일) 박람회 2일 - 샌프란시스코 + LA 관광 / 아시아나
 5 안 4월17일-23일 (7일) 박람회 3일 - LA 관광 / 아시아나
 6 안 4월17일-23일 (7일) 박람회 4일 - ★ 현지 왕복 국내선 이용 / 아시아나
 7 안 4월18일-24일 (7일) 박람회 3일 - ★ 라스베이거스 직항 / 대한항공
 8 안 4월17일-22일 (6일) 박람회 3일 - ※ 한정좌석 - 선착순 예약 / UA항공
 9 안 4월15일-24일(10일) 라스베가스7박 ★ 라스베이거스 직항 / 대한항공
 10 안 4월16일-23일 (8일) 라스베가스6박 ★ 현지 왕복 국내선 이용 / 아시아나
 11 안 4월16일-23일 (8일) 라스베가스6박 ※ 한정좌석 - 선착순 예약 / UA항공

※ 세부안내는 당사 문의요망

북경방송 CCBN

- 기간 : 2016년 3월 24일 - 26일 (3일간)
- 내용 : 방송/케이블/위성 관련 중국 최대 규모의 박람회 (1,000여사 참가)
- 1안 : 2016년 3월 24일 (목) - 3월 27일 (일) (4일간) ₩ 828,000
 2안 : 2016년 3월 24일 (목) - 3월 26일 (토) (3일간) ₩ 690,000
- ▶ 국적기, 특급 호텔, 관광, 차량&가이드 등 일체 포함 (중국비자 별도)
 - ▶ 항공+호텔만도 이용 가능합니다.

해외전시회

• 바르셀로나 모바일 기술 박람회 - GSMA	스페인	02-22 ~ 02-25
• 광저우 음향/비디오/무대/조명장비전	중국	02-29 ~ 03-03
• 두바이 방송/케이블/통신전 - CABSAT	E K	03-08 ~ 03-10
• 하노버 정보통신 - CeBIT	독일	03-14 ~ 03-18
• 북경 방송/케이블/위성전 - CCBN	중국	03-24 ~ 03-26
• 깐느 방송/미디어 프로그램전 MIPTV	프랑스	04-04 ~ 04-07
• 라스베가스 보안장비전 - ISC West	미국	04-06 ~ 04-08
• 프랑크푸르트 조명/악기/음향전	독일	04-07 ~ 04-10
• 라스베가스 방송전 - NAB	미국	04-18 ~ 04-21
• 상해 아시아 가전 박람회 - CES	중국	05-11 ~ 05-13
• 보스톤 케이블TV 방송전 NCTA	미국	05-16 ~ 05-18
• 싱가폴 방송/정보통신 - BroadcastAsia	싱가폴	05-31 ~ 06-03
• 라스베가스 시청각 장비전 - InfoComm	미국	06-04 ~ 06-10
• LA 컴퓨터 그래픽전 - SIGGRAPH	미국	07-26 ~ 07-28
• 북경 방송장비전 - BIRTV	중국	08-24 ~ 08-27
• 북경 음향/비디오/오디오/조명전 - PALM	중국	09-01 ~ 09-04
• 베를린 가전 및 멀티미디어전 - IFA	독일	09-02 ~ 09-07
• 암스테르담 방송장비전 - IBC	네덜란	09-09 ~ 09-13
• 웰른 사진기술/영상/비디오	독일	09-20 ~ 09-25
• 동경 전자/통신/컴퓨터/네트워크전	일본	10-05 ~ 10-08
• 홍콩 전자제품 산업전 - electronic Asia	중국	10-13 ~ 10-16
• 두바이 가전/네트워크/정보통신전 GITEX	E K	10-16 ~ 10-20
• 깐느 TV/케이블 방송콘텐츠 MIPCOM	프랑스	10-17 ~ 10-20
• 상해 조명/음향/악기/음악 전	중국	10-26 ~ 10-29
• 동경 방송기기전 - Inter BEE	일본	11-16 ~ 11-18

※ 세부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참조

고객과 함께 하는 진정한 여행사!

기업체 출장 28년 경력으로~

- ▶ 해외 전시회 참관행사
- ▶ 산업시찰 및 벤치마킹
- ▶ VIP 행사 전문
- ▶ 해외 방송시설 견학행사
- ▶ 기업체 및 공무원 연수
- ▶ 가족여행, 골프투어, 신혼여행 특가 서비스
- ▶ 최저 항공료와 최적의 호텔안내
- ▶ 차별화된 프리미엄 여행서비스
- ▶ 전 여행사 패키지여행 최대 7% 할인